

2026년 전자금융 감독·검사 방향

금융감독 업무설명회

2026. 3. 4.

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국 · 전자금융검사국



금융은 **튼튼**하게
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CONTENTS

1. 전자금융업 현황

2. 비전 및 전략

3. 2026년 전자금융 감독 업무계획

4. 2026년 전자금융 검사 업무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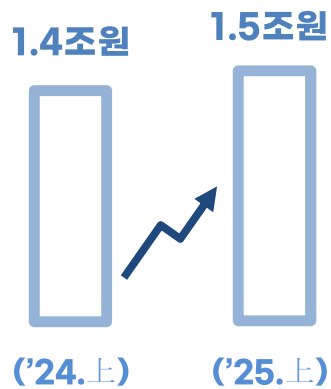
1. 전자금융업 현황 ①

1 전자금융업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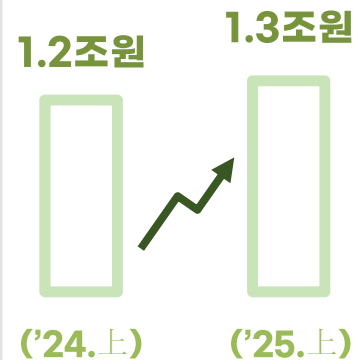


전자금융 거래 규모 및 등록 전금업자 수 증가 등 전자금융업의 성장세 지속
다만, 경쟁심화에 따라 중소형사 중심으로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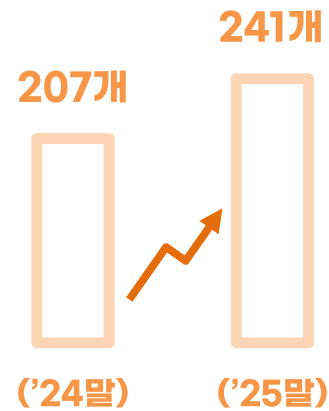
< PG 거래(일평균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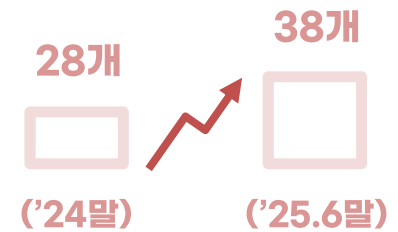
< 선불 이용(일평균) >



< 등록 전금업자 >



<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사 >



1. 전자금융업 현황 ②

2 전자금융업 규제 환경 변화 (1)



경영지도기준 미충족시 조치요구권 신설 → '25.12월 既 시행

- ▶ 전금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미충족시

①조치요구 → (조치요구 미이행시) ②업무정지 → (업무정지 누적시) ③등록취소 부과



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위반시 조치 강화 → '25.12월 既 시행

- ▶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위반시

①시정명령 또는 조치요구 → (조치요구 미이행시) ②업무정지 → (업무정지 누적시) ③등록취소 부과

※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위반시 과태료(5천만원 이하) 부과 등도 가능



공시 의무 신설 → '26.12월 시행

- ▶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정보, 법규 준수현황 등 공시 의무를 법제화

1. 전자금융업 현황 ③

2 전자금융업 규제 환경 변화 (2)



PG 정산자금 외부관리 및 정산기한 준수 의무 신설 → '26.12월 시행

- ▶ PG사가 보유한 정산자금을 신탁, 예치, 보증보험 등의 방식으로 외부 관리*하도록 의무화
 - ※ ('26.12월~'27.12월) 60% → ('27.12월~'28.12월) 80% → ('28.12월~) 100%
- ▶ PG 계약 등에서 정한 정산기한 준수 의무 도입



전자금융업 진입 규제 합리화 → '26.12월 시행

- ▶ 이커머스 등과 같이 자기 사업의 일부로 내부 정산(자기 정산) 하는 경우 『전금법』 적용 배제
 - ※ 내부 정산과 제3자 정산을 모두 수행하는 PG사의 경우 『전금법』 적용 대상
- ▶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규모 300억원 초과 PG사는 '27.12월까지 자본금 상향 의무(10→20억원)
- ▶ 대주주 변경시 15일 이내 변경등록 의무화

1. 전자금융업 현황 ④

3 전자금융업 감독·검사 체제



2025년 이후 전자금융감독국(3팀), 전자금융검사국(4팀) 등 전담조직 운영

전자금융 감독국

- ① 전자금융총괄팀 → 법규 제·개정, 전금업 등록, 비조치의견서, 분쟁 조정
- ② 건전경영팀 → 업무보고서, 경영지도기준, 회계처리
- ③ 지급결제제도팀 → 약관, 수수료 공시, 이용자 자금 보호

전자금융 검사국

- ① 검사기획상시팀 → 검사 계획, 심사 조정, 상시감시, 금융사고 보고 접수
- ② 검사 1~3팀 → 검사 실시, 불법행위 등 민원

CONTENTS

1. 전자금융업 현황

2. 비전 및 전략

3. 2026년 전자금융 감독 업무계획

4. 2026년 전자금융 검사 업무계획

2. 비전 및 전략

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전자결제 환경 조성



전자금융업 건전 경영 및 소비자보호 규율 정립

1 사용자 권익 제고

2 건전 경영 체제 확립

3 전자금융업 성장 지원



이용자 피해 유발요인에 대한 검사역량 집중

1 집중 테마 점검

2 민생범죄 근절, 영업질서 정착

3 리스크 중심의 효율적 상시감시

CONTENTS

1. 전자금융업 현황

2. 비전 및 전략

3. 2026년 전자금융 감독 업무계획

4. 2026년 전자금융 검사 업무계획

3. 2026년 전자금융 감독 업무계획 ①

1. 이용자 권익 제고 (1)



이용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전자금융 거래 환경 조성

- ▶ 선불 소멸시효 완성 前 소비자 사전통지* 등 선불 영업 관행 개선
 - * '25.5월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%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(권익위)
- ▶ 전금업자 약관에서 선불충전금 환불 제한 등 이용자 권리를 제약하지 않도록 지도
 - 전금업 모델 약관 및 공정위 '신유형 상품권' 약관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개선 지도



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·외부관리 제도 정착

- ▶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“예치” 계좌의 관리·통제 강화 (은행연합회 등 T/F 운영 중)
 - (예) 표준상품 도입을 통해 상계처리·가압류·담보·질권설정 금지 등 전산 통제
- ▶ PG 정산자금 관리 현황 점검 등 법상 신설된 외부관리 시행에 만전
 - 개정 「전금법」 시행 前 가이드라인 운영을 통해 규제 공백 완화('26.1~12월)

3. 2026년 전자금융 감독 업무계획 ②

1. 이용자 권익 제고 (2)



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결제 수수료 합리화 등 추진

- ▶ 영세·중소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 부과 등 불합리한 사례 발굴 및 개선 공유
 - 반기마다 수수료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, 필요시 「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」 개정 등 제도 개선
- ▶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 회사의 단계적 확대 등 수수료 비교 가능성 제고
 - ('26년) 월평균 결제규모 5천억원 이상 → ('27년) 월평균 2천억원 이상 → ('28년) 쉐 선불·PG사
- ▶ 가맹점수수료 고지 범위 및 시점 명확화, 수수료 변경시 고지 의무 도입 등
 - 『전자금융감독규정』 개정 절차 진행 중

3. 2026년 전자금융 감독 업무계획 ③

2. 건전 경영 체제 확립



건전성 수준에 따른 단계적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
- ▶ 부실 우려 전금업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
 - 다각적 감시지표 운영을 통해 고위험 전금업자 선별 → 밀착 모니터링 실시
 - 경영지도비율 미충족 가능성이 높은 경우 → 경영진 면담, 경영개선 계획 징구 등 실시
- ▶ 경영지도기준 미충족사에 대해서는 법상 신설된 조치요구권 적극 활용
 - 자본금 증액,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 [금융위]



전금업자 경영공시 제도 확립

- ▶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세부 공시 항목 및 공시 방법 등을 제도화
 - (예) 정기 공시 및 수시 공시 구분, 홈페이지 등 공시, 공시 기한 등



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 유도

- ▶ 금년 1월 시행된 『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』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도
 - 결제 리스크 평가(매년 1회 이상) 결과를 징구하여 이행실태 점검 예정

3. 2026년 전자금융 감독 업무계획 ④

3 전자금융업 성장 지원



전금업 등록 효율화

- ▶ 신속한 등록 처리를 위해 심사 진행도, 신청시기 등에 따라 그룹화하여 순차적 처리
 - 사전 그룹 면담을 통해 등록 요건, 심사 절차 등을 일괄 안내하여 전금업 규제 이해도 제고를 유도
- ▶ 『전금업 등록 매뉴얼』 개정(금감원 홈페이지 게시) 등 등록 절차 안내 및 홍보



개정 『전금법』의 안정적 정착·시행 유도

- ▶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『전금법』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감독제도 정비·개선
 - ※ 『전금법』 사항에 대한 특례 부여 등 샌드박스 심사 지원

CONTENTS

1. 전자금융업 현황

2. 비전 및 전략

3. 2026년 전자금융 감독 업무계획

4. 2026년 전자금융 검사 업무계획

4. 2026년 전자금융 검사 업무계획 ①

1 집중 테마 점검 실시



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점검

- ▶ 선불지급수단 운영·관리, 충전방식·환급조건 등에 대한 중점 점검 실시
 - 이용자 피해 유발요인 개선
 -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안내의 적정성, 충전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 등
- ▶ 전금업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(FDS) 구축현황 점검 실시
 - 불법거래 탐지 역량 제고
- ▶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점검 실시
 - 알고리즘 심사항목 및 검증방법 개선
 - 이해충돌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고리즘 설계 적정성 점검 및 정교화 추진

4. 2026년 전자금융 검사 업무계획 ②

2. 민생범죄 근절 및 건전한 영업질서 정착 유도



민생범죄와 직결되는 불건전 영업 행위를 사전 차단

- ▶ 고정식 가상계좌 발급 및 이용이 과다한 업체에 대해 업무취급의 적정성 여부 파악
- ▶ 가상계좌 재판매 PG사 업무처리기준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
 - 가맹점 심사·관리 강화, 불법 의심거래 차단 의무 등
- ▶ 청소년 도박에 악용되는 무기명 선불에 대한 통제·관리방안 전파

4. 2026년 전자금융 검사 업무계획 ③

③ 리스크 중심의 효율적 상시감시 체계 운영



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상시감시 및 검사 실시

- ▶ (대형 전금업) 전통 금융회사 수준의 정보보안, 내부통제 체계 등에 대한 밀착감시 및 점검
- ▶ (중소 전금업) 간편지표 중심의 시스템 기반 상시감시 체계 운영



이상징후 자동분석 시스템 고도화

- ▶ 자동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리스크 취약 부문을 집중 점검
 - 가상계좌 관련 이상 가맹점 추출 및 자금세탁 등 불법 연계성을 확인
 - 선불업자 자금세탁 등을 감시하기 위한 자동분석 시스템 구축

감사합니다

금융은 **튼튼**하게

소비자는 **행복**하게